장애인과 일곡동서 광주시청까지 저상버스 타고 가 보니

12시에 나와 1시 52분에 도착…“서울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29번 타고 운암동서 내려…16번 버스 환승하려 200m 이동 불편
운전기사가 전동휠체어 안전고리 안 매줘 멈출 때 마다 ‘움찔’
전체 101개 노선 중 저상버스 34개 노선…전남은 5개 시만 운행

“일곡지구에서 치평동 가는 게 광주에서 서울가는 것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네요.”

김병만(37)씨의 시청 방문길은 고생길, 눈칫길이었다.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기다리느라 일반 버스를 그대로 보내야 했고 다른 승객들이 자신 때문에 오래 기다릴까 눈치를 보며 불편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그는 20일 낮 12시 19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살레시오고 앞 종점에서 29번 저상버스에 올랐다. 운암 3단지에서 16번 버스로 갈아타 시청에 도착해 민원 서류를 전달한다는 게 김씨 계획이었다.

김씨 등 광주지역 장애인 16명은 이날 활동가 1~2명의 도움을 받아 8개조로 나눠 일곡동 버스 종점에서 저상버스 5개 노선을 나눠 타는 ‘저상버스 타고 시청 찾아오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한 ‘함께 탑시다! 같이 갑시다!’라는 행사의 하나로 이뤄졌다.

김씨는 낮 12시부터 기다려 19분이 지나자 29번 버스가 도착했다. 저상버스였다. 다행히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 저상버스 타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직선거리로 7.2㎞로 자가용으로 20여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나마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도 20%대에 불과하다. 모든 노선에 운행되는 것도 아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101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999대 중 저상버스는 34개(33.6%)노선, 216대(21.6%)가 전부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시내버스 저상버스 배치율을 45%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래된 일반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려면 2배 이상 비싼 친환경으로만 바꿔야 하는 정부 방침 탓에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저상버스 교체율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8년만 해도 광주시는 애초 138대를 도입하려다 20대만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62대를 계획했다가 10대만 구입했을 뿐이다. 올해 목표는 101억 2700만원을 투입해 29대(전기차 23대·수소차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남은 더하다. 721대 시내버스 중 95대(13.1%)만이 저상버스다. 목포(29대)·여수(25대)·순천(28대)·광양(5대)·나주(8대) 등 5개 시에서만 운행된다. 다른 17개 군에서는 저상버스를 찾아볼 수 없다.

올해도 저상버스 15대 (목포 4대, 여수 7대, 순천2대, 광양2대)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1년까지 231대를 도입하겠다는 전남도 목표(전체 32%)도 믿기 어렵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 설명이다.

버스기사는 전동휠체어를 탄 김씨를 보고 “어디로 가세요?”라고 물었다. 김씨는 “시청까지 가요”라고 대답했다. 버스 기사는 차 높이를 조정, 뒷문을 열고 버튼을 눌러 버스 발판을 인도까지 연결했다.

기사는 김씨가 탑승하자 운전석에서 나와 뒷문 앞에 있는 좌석 2개를 접어 자리를 마련해줬다. 김씨가 “안전고리 채워주세요”라고 해 안전고리를 걸고 출발하기까지 4분이 더 걸렸다.

환승지인 운암 3단지에 도착, 하차하는 데 3분이 걸렸다. 시청으로 가려면 16번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건너편으로 210m 가량 이동해야 한다. 김씨는 이동하는 내내 긴장해야 했다. 튀어나온 맨홀 뚜껑 위를 지나칠 때 휠체어가 비틀거렸고 경사로가 급한 구간에서는 속도를 늦추는데 신경을 썼다.

환승하는 곳에 도착한 시각은 낮 12시 55분. 6분 걸려 도착했지만 1시 27분이 되서야 16번 버스로 갈아탈 수 있었다. 앞서 도착한 16번 버스가 일반 버스라 탈 수 없었다. 김씨는 “정류장 앞 화물차 등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버스기사가 몰라보고 지나칠 때도 있다”고 했다.

행사에 동행한 장애인 활동가 김정씨는 “버스내 휠체어 탑승 공간이 있어도 일반 승객들로 가득차 있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도로에 내려주는 버스기사도 있어 인도로 올라서기 위해 경계 턱이 없는 곳을 찾아 200m정도를 휠체어로 이동하는 불안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장애인들 설명이다.

30분 내로 환승해야 무료지만 버스를 2대 기다리느라 요금을 냈다. “무료 환승 시간내 환승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했다. 김씨는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아 2번 만에 버스를 탔다”고 했다.

안전고리는 전동휠체어 뒤에 고정하는 만큼 김씨 혼자서 연결할 수 없지만 버스기사는 탑승을 도운 뒤 곧바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장애인단체들은 버스운전기사의 리프트 조정 미숙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움찔 거렸다. 김씨는 “안전고리를 걸어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들의 안전벨트를 걸어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씨는 오후 1시 52분에 시청에 도착했다.

정성주 광주시장애인파별철폐연대 소장은 “새로운 버스를 구매할 때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노선의 다양화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 버스 종점에서 한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오르고 있다.

전두환, 5·18 앞두고 광주 법정 설 듯…27일 출석 가능성

이순자씨 동석 신청서 내

전두환(89)씨가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7일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라며 “지난해 공판 때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던 부인이 이번 공판에서도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서 향후 재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일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전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앞서 열린 재판준비기일에서 판사 경질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등으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했다.

전씨는 이같은 일정에 따라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위해 재판 출석 의무가 생겼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또 전씨 재판을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33석을 제공키고 하고 오는 2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 유명 사학 법인 교비 횡령·부적정 회계

전남도교육청 특별조사서 적발

목포의 유명 사립학교 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오다가 전남도교육청의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목포지역 모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23일부터 4월1일까지 8일 간 특별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학원은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교비 회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 984만원을 횡령했다. 또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 5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있는 해당 사학법인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할 것을 이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행정실장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납품처 담당 직원들에게 30만원 수준 골프 접대

법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친 징계”

납품처 담당 직원들에게 30만원 수준의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납품업체인 A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기업은 지난 2016년 6월, 7100만원 규모의 자재를 제작·공급하면서 한전 직원들에게 검수를 요청했고 이들 직원 들은 규격·수량·품질 등을 검사한 당일, 해당 기업 대표와 골프를 쳤다.

A 기업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골프 비용으로 49만여원을 법인 카드로 부담했다. 한전측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 ‘자재검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해당 업체에 ‘3개월 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기업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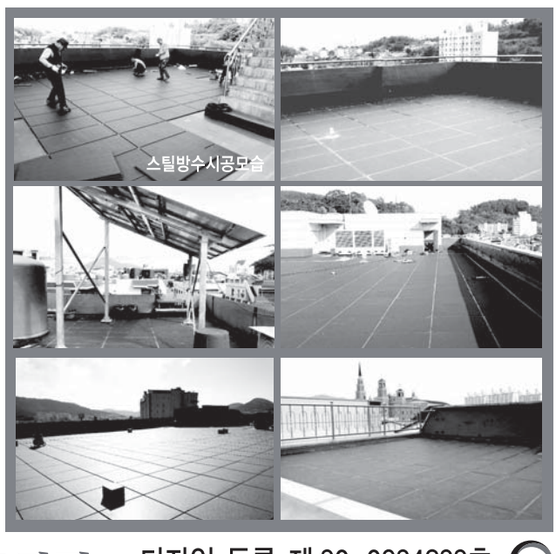
재판부는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A기업 행위로 인해 침해된 공익에 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며 “제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기업의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지출한 비용도 37만여원으로 많지 않다”며 “A기업 매출 중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한전측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3개월 간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절차에 참가할 수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